

01

세제



고소득 작물재배업 소득세 과세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044-215-4151)

- 수입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작물재배업(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업 제외)에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3년 세법개정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결

고소득 작물재배업 소득세 과세

■ 추진배경 : 과세형평 제고

■ 주요내용 : 수입금액 10억원을 초과하는 작물재배업을 과세대상에 포함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작물재배업으로 분류된 작물이 과세대상이나, 곡물 및 기타식량작물 재배업 관련 작물은 과세 제외

구 분		세분류	세세분류
작 물 재 배 업	과세제외	곡물 및 기타식량작물재배업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업
	과세	채소, 화훼작물 및 종묘재배업	채소작물재배업
			화훼작물재배업
			종자 및 묘목생산업
		과실, 음료용 및 향신용 작물 재배업	과실작물재배업
			음료용 및 향신용 재배업
		기타작물재배업	기타작물재배업
		시설작물재배업 ※시설: 움막,온실,비닐하우스, 수경재배시설, 공장형 설비 등 특수 고정시설	콩나물재배업
			채소, 화훼 및 과실작물 시설재배업
			기타 시설작물 재배업

■ 시행일 : 201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소규모 주택임대소득 세부담 완화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044-215-4151)

-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의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자의 경우 '14~'16년 소득분에 대해서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 또한, 종전에는 주택임대소득을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종합과세)하였으나
 - '17년 이후 소득분부터는 14%의 세율로 별도로 분리과세됩니다.
- 주택임대업에서 발생하는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은 근로소득금액 등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고 '14년에 발생한 결손금 분부터 적용됩니다.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3년 세법개정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결

소규모 주택임대소득 세부담 완화

■ 추진배경 :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

■ 주요내용

- 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의 소규모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 '14~'16년 소득분 비과세
 - '17년 이후 소득분부터 분리과세
- 주택임대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은 근로소득금액 등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가능

※ 분리과세 방법

- 필요경비율 60%
- 기본공제 4백만원 인정
 - * 다른 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
- 단일세율 14%
- 종합소득 과세방식과 비교하여 낮은 금액으로 과세

■ 시행일 : 201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면세사업자 전자계산서 발급 및 전송 의무화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044-215-4151)

■ 다음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발급 후 다음날까지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①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중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자로서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 '15.7.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 ② 개인사업자 중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자: '16.1.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 전자계산서 발급 및 전송의무 불이행시 가산세(공급가액×0.1%~1%)가 부과됩니다.

- 위 ①의 사업자: '16.1.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 위 ②의 사업자: '17.1.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 전자계산서를 자진 발급하는 경우 '15.1.1. 이후 거래분부터 발급건당 200원(연간 100만원 한도)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4년 세법개정안

면세사업자 전자계산서 발급 및 전송 의무화

- 추진배경 : 부가가치세 면세 거래의 투명성 제고
- 주요내용
 - 다음의 면세사업자는 전자계산서 발급 및 전송을 의무화
 -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중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자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자
 - 의무불이행시 가산세가 부과되고 자진발급시 건당 200원 세액공제
- 시 행 일 : 2015.1.1.



자동차 전문 수리업 등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044-215-4151)

-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전세버스 운송업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
 -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 해당 사업자는 '15.4.30.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 '15.5.1. 이후 거래분부터는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거래대금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4년 세법개정안

자동차 전문 수리업 등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 추진배경 : 현금거래의 투명성 제고
- 주요내용 : 다음의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
 - 자동차 종합 수리업
 - 자동차 전문 수리업
 -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 전세버스 운송업
 - 장의관련 서비스업
- 시 행 일 : 2015.5.1.



월세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및 공제대상 확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044-215-4152)

■ '14년 월세 지급분부터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였고, 공제대상을 중산층까지 확대하였습니다.

- 종전 월세지급액을 소득공제하는 방식에서 월세지급액(연간 750만원 한도)의 10%를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였습니다.
- 전세 → 월세 전환에 따른 중산층의 월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제대상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까지로 확대하였습니다.
(종전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4년 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월세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및 공제대상 확대

■ 추진배경 : 중산·서민층 월세 부담 완화

■ 주요내용

- 월세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 종전 : 월세지급액의 60%를 소득공제(500만원 한도)
 - 개정 : 월세지급액(750만원 한도)의 10%를 세액공제
- 공제대상 확대
 - 종전 :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성실사업자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 개정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성실사업자는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 시 행 일 : 2014.1.1. 이후 지급분부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연장 및 한시적 확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044-215-4152)

- 건전소비문화 정착 및 세원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16.12.31.까지 2년 연장하였습니다.
- 소비심리의 개선을 위해 작년보다 늘어난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의 본인 사용실적에 대해 한시적으로 소득공제율을 인상하였습니다.
(‘14.7~’15.6월 1년간 지출분)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4년 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연장 및 한시적 확대

- 추진배경 : 건전소비문화 정착 및 세원투명성 제고 등
- 주요내용
 - 적용기한 연장 : '16.12.31까지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14.7~'15.6)에 대한 소득공제율 한시적 인상(30%→40%)
 - '14년 신용카드 등 본인 사용금액이 직전연도 대비 증가한 경우로서 근로자 본인의 '14년 하반기, '15년 상반기 사용금액이 각각 '13년 사용액의 50% 보다 증가한 금액
- 시 행 일 : 2014.7.1. 이후 지출분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소득공제 대상 · 한도 확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044-215-4152)

■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및 한도를 확대하였습니다.

- 내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차입분부터 만기 15년 이상 고정금리이고 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인 경우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한도를 1,800만원으로 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또한, 만기 10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인 경우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한도를 300만원으로 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4년 세제개편 보도자료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소득공제 대상 · 한도 확대

■ 추진배경 : 가계부채 구조개선

■ 주요내용

- 공제대상 차입금 추가
 - 만기 15년 이상 고정금리 & 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공제한도 1,800만원)
 - 만기 10년 이상 고정금리 or 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공제한도 300만원)

■ 시 행 일 : 2015.1.1. 이후 차입분부터

난임시술비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044-215-4152)

■ 난임부부의 임신·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난임시술비에 대해서는 의료비 공제가 한도없이 적용됩니다.

- 종전 : 한도 미적용(본인·장애인·65세이상 노인 의료비)
- 개정 : 난임시술비도 한도 미적용 의료비에 추가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4년 세제개편 보도자료

난임시술비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 추진배경 : 난임부부의 임신·출산 지원

■ 주요내용

- ① 공제방식
 - 총급여 3% 초과 금액의 15%를 세액공제
- ② 한도 미적용 의료비
 - 현행 : 본인·장애인·65세 이상 노인 의료비
 - 개정 : 본인·장애인·65세 이상 노인 의료비, 난임시술비 추가
- ③ 700만원 한도 적용 의료비
 - 그 밖의 기본공제대상자 의료비

■ 시 행 일 : 2015.1.1.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044-215-4152)

-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를 위하여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17% 분리과세) 제도의 적용기한이 2년(2016.12.31) 연장되었습니다.
- 헤드쿼터 인증기업*에 대해서는 본 제도의 적용기한(2016.12.31)을 삭제하여 안정적으로 본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글로벌기업의 핵심기능(사업전략, 인사관리, R&D 등) 지원·조정 업무 수행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4년 세제개편 보도자료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 추진배경 :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 주요내용
 - 국내 근무시작일부터 5년간 17% 단일세율 적용
 - 적용기한 폐지 및 연장
 - 헤드쿼터 인증기업 : 적용기한 폐지
 - 그 밖의 기업 : 2016.12.31.(2년 연장)
- 시 행 일 : 2015.1.1.

중소기업 취업청년 과세특례기간 연장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044-215-4152)

■ 중소기업 취업청년의 장기근속을 장려하기 위해 병역을 이행한 후 동일기업에 복직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세 감면기간이 아래와 같이 연장됩니다.

- (현행) 취업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소득세의 50% 감면
- (개정) 감면기간 연장
 - ① 취업일부터 병역 이행 후 복직일까지의 기간이 3년이 경과한 경우: 복직일이 속하는 달부터 2년이 되는 달까지 감면
 - ② ① 외의 경우: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감면

〈 감면기간 적용사례 〉

구분	군 입대 전 감면기간	군복무기간	복직 후 감면기간	총감면기간
①의 경우	2년 10개월	1년 10개월	2년	4년 10개월
②의 경우	6개월	1년 10개월	2년 8개월	3년 2개월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4년 세제개편 보도자료

중소기업 취업청년 과세특례기간 연장

- 추진배경 : 중소기업 취업청년 장기근속 장려
- 주요내용
 - 종전 :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해서는 취업후 3년간 근로소득세 50% 감면
 - 개정 : 중소기업 취업청년이 병역을 이행한 후 동일기업에 복직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세 감면기간을 2년 연장(3년→5년)
- 시 행 일 : 2015.1.1.

신규사업장의 원천징수세액 반기납부 신청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044-215-4152)

■ 납세자 편의제고를 위해 신규사업자인 원천징수의무자도 원천징수세액 반기납부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 종전 : 신규사업장의 경우 반기납부 적용 불가
- 개정 : 신규사업자 중 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도 반기납부 신청 가능

〈 적용 사례 〉

(현행)	'14년 상반기 창업	'15년 하반기부터 반기납부 적용 가능('15.6월 신청)
	'14년 하반기 창업	'15년 하반기부터 반기납부 적용 가능('15.6월 신청)
(개정)	'14년 상반기 창업	'14년 하반기부터 반기납부 적용 가능('14.6월 신청)
	'14년 하반기 창업	'15년 상반기부터 반기납부 적용 가능('14.12월 신청)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4년 세제개편 보도자료

신규사업장의 원천징수세액 반기납부 신청

- 추진배경 : 납세자 편의제고
- 주요내용
 - 종전 : 신규사업장의 경우 반기납부 적용 불가
 - 개정 : 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신규사업자도 반기납부 신청 가능
- 시 행 일 : 영 시행일 이후 반기납부 신청분부터

퇴직연금 세액공제 적용 확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044-215-4153)

- 퇴직연금에 납입 시 납입금에 대하여 최대 700만원의 12%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소득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4년 세법개정안

퇴직연금 세액공제 한도 확대

- 추진배경 : 현금거래의 투명성 제고
- 주요내용 :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 납입한 금액을 합하여 납입금액 기준으로 400만원까지 12%를 세액공제하고, 추가로 퇴직연금에 납입하는 경우에는 납입 금액 기준으로 300만원까지 12% 세액공제

※ 퇴직연금 세액공제 한도 확대 적용 방법

납입액		연금계좌 세액공제 (400만원 한도)		퇴직연금 세액공제 (300만원)	총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	세액공제액 (공제율 12%)
연금저축	퇴직연금	연금저축	퇴직연금			
-	700만원	-	400만원	300만원	700만원	84만원
200만원	500만원	200만원	200만원	300만원	700만원	84만원
400만원	300만원	400만원	-	300만원	700만원	84만원
500만원	200만원	400만원	-	200만원	600만원	72만원
700만원	-	400만원		-	400만원	48만원

- 시 행 일 : 201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자녀장려세제 도입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044-215-4154)

■ 부부의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 미만인 가구로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는 자녀 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지원자녀수 제한 없음)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자녀장려세제가 시행됩니다.

- 자녀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근로장려금 수급요건 중 총소득요건 이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5.1~5.31)에 자녀장려금 신청서와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택요건 : 1세대가 무주택이거나 1주택 이하를 보유할 것

재산요건 : 가구원(가구주 포함)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 등 재산합계액이 1억4천만원 미만일 것

- 자녀장려금은 수급자격에 대한 심사를 거쳐 9월 중 지급됩니다.
- 자녀장려금은 소득세법에 따른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으며, 해당 연도의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3년 세법개정안

자녀장려세제 도입

■ 추진배경 : 저소득가구의 자녀양육비 지원

■ 주요내용

- 부부의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 미만인 가구로서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장려금 지급
 - 자녀 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을 지급하되, 부부의 총급여액등의 크기에 따라 차등 지급
 - 총소득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 수급요건과 동일
 - 부양자녀 요건과 판정시기, 자녀장려금의 신청, 결정, 환급의 제한 등은 근로장려금의 해당 규정을 준용
- 소득세법 제59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음
- 자녀장려금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재산기준 1억원~1억4천만원까지는 자녀장려금의 50%만 지급

■ 시 행 일 : 2015.1.1.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확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044-215-4154)

-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 근로자 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자*로 확대되고 기초생활수급자도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

*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에 한하며, 전문직사업자와 그 배우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됨

- 또한, 사업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액(150만원) 이하인 사업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고 근로장려금만 신청한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은 맞벌이 가구의 경우 연간 최대 210만원(홀벌이 가구 170만원, 단독가구 7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고, 관할 세무서에 매년 5월 중 신청하면 수급요건이 충족될 경우 9월 중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 ○ 사업자 확대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09년 세제개편안 국회 재정위 의결
- 기초생활수급자 확대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3년 세법개정안
- 영세 자영업자의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개선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4년 세법개정안 국회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확대

- 추진배경 : 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를 통한 탈수급 지원 등
- 주요내용
 -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을 사업자로 확대(전문직 사업자 및 배우자 제외)
 - * 당초 계획을 법령에 명확화하여 제도의 예측가능성 제고
 - 기초생활수급자를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에 포함
 - 영세자영업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없이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 *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액(150만원) 이하인 사업자
- 시 행 일 : 2015.1.1.

근로장려금 수급요건 중 재산·주택기준 완화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044-215-4154)

■ 근로장려금 수급 요건 중 주택 가격기준과 재산기준이 완화됩니다.

- 주택 가격기준은 종전에는 1세대가 기준시가 6천만원 이하인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만 근로장려금 수급자격이 있었으나, 가격기준을 폐지하여 주택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 재산기준은 종전에는 가구원(가구주 포함)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만 근로장려금 수급자격이 있었으나, 금년부터는 1억4천만원 미만인 경우까지로 확대하였습니다.
 - 다만, 재산합계액이 1억원 이상 1억4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3년 세법개정안

근로장려금 수급요건 중 재산·주택기준 완화

■ 추진배경 : 저소득자의 재산기준을 현실화하여 지원 확대

■ 주요내용

- 주택·재산기준 완화
 - 1세대가 무주택 또는 1주택(주택 가격기준 삭제)을 소유할 것
 - 가구원 소유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일 것
 - * 재산합계액이 1억원 이상 1억4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포함)의 50%만 지급

■ 시 행 일 : 2015.1.1.



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기간 연장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044-215-4154)

- 근로장려금을 신청기간(5.1~5.31)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11월까지)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이 경우에는 10%만큼 감액하여 지급됩니다.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4년 세법개정안

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기간 연장

- 추진배경 : 납세자 권익 보호
- 주요내용 : 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기간 연장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5.1~5.31) 종료일의 다음날로부터 6개월(종전 3개월) 이내
- 시 행 일 : 2015.5.1.

비사업용 토지 등 양도시 추가과세 1년 유예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044-215-4221)

■ 개인 및 법인(중소기업에 한함)이 비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시 추가과세 적용이 1년 유예됩니다.

- 개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경우 추가과세(기본세율 + 10%p) 적용을 1년 유예하여 '15년에는 기본세율(6~38%)이 적용됩니다.
- 법인(중소기업에 한함)이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경우 추가과세(양도차익의 10%) 적용을 1년 유예하여 2015년에도 추가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4년 세제개편 보도자료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추가과세 적용 1년 유예

■ 추진배경 : 부동산 거래 활성화 지원

■ 주요내용

현 행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추가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율) 기본세율(6~38%)+10%p • (시행시기) '15.1.1. 이후 시행 ('14년 추가과세 유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과세 1년 유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16.1.1. 이후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보유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추가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율) 법인세율+10%p • (시행시기) '14.1.1. 이후 시행* <p>* 단 중소기업은 '14년 추가과세 유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추가과세 1년 유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중소기업 1년 추가 유예 ('16.1.1. 이후 시행)

■ 시 행 일 : 2015.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공익사업 대토보상에 대한 과세이연 대신 감면을 선택한 경우 감면을 상향 조정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044-215-4221)

- 공익사업 시행에 따라 보유하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대토보상을 받는 경우로서 양도인이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조특법 § 77의2) 대신 감면 (조특법 § 77)을 신청하는 경우 채권보상과 동일한 20%의 감면이 적용됩니다.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3년 세제개편 보도자료

공익사업 대토보상시 감면을 상향 조정

- 추진배경 : 대토보상은 환금성이 제약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현금보상(15%)의 경우보다 높은 채권보상(20%)에 준하는 감면율을 적용

주요내용

현 행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토보상시 과세이연 <p>※ 과세이연을 받지 않고 양도세 신고 납부시 집행상 현금보상에 준하는 15% 감면을 적용 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익사업 대토보상시 양도세 감면을 인상 <p>○ 15% ⇒ 20% * 채권보상시 감면을 20%</p>

- 시 행 일 : 2015.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044-215-4221)

- 거주자가 '15.1.1.~'17.12.31.까지 주택을 취득하고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10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한 경우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세는 100% 감면됩니다.
- 준공공임대주택의 의무 임대기간 변경*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시 임대기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 * 임대주택법상 준공공임대주택 의무임대기간 완화 : (10년) → (8년)
 - 10년 이상 임대시 : 장특공제율 60%
 - 8년 이상 임대시 : 장특공제율 50%(신설)
- 기존 매입임대주택의 준공공임대주택 전환이 허용됩니다.
 - 매입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 등록시 기존 임대기간의 50%를 준공공임대주택 임대기간으로 인정됩니다.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4년 세제개편 보도자료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 추진배경 : 민간 준공공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 주요내용
 - ① '15년부터 3년간 주택 취득하여 준공공임대주택 활용후 양도시 양도세 100% 감면
 - ② 임대기간별로 준공공임대주택의 장특공제율 차등 적용
 - 현행 : 10년 이상 임대시 60% 장특공제율
 - 개정 : 8년 이상 임대시 50% 장특공제율
 - ③ 매입임대주택의 준공공임대주택 전환 허용
 - 매입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전호나 등록시 기존 매입임대주택 임대기간의 50%를 준공공임대주택 임대기간으로 인정
- 시 행 일 : 2015.1.1 이후 취득·양도분부터 적용



준공후 미분양주택 취득·임대후 양도시 양도세 감면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044-215-4221)

- '15.1.1. 현재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여 5년 이상 임대후 양도하는 경우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50%를 공제합니다.
 - (주택 규모)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이고 연면적(공동주택은 전용면적)이 135㎡ 이하
 - (임대 요건) '15.1.1.~'15.12.31.까지 임대계약 체결 및 임대사업자 등록 후 5년 이상 임대
- 동 특례주택은 일반주택 양도시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준공후 미분양주택 취득·임대후 양도시 과세특례

- 추진배경 :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준공후 미분양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도록 유도
- 주요내용
 - '15.1.1. 현재 준공후 미분양주택을 취득하여 5년 이상 임대하고 양도시 취득한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50% 공제
- 시 행 일 : 2015.1.1 이후 취득·양도분부터 적용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 044-215-4231)

■ 음식점업 등에 대한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혜택이 확대됩니다.

- 개인사업자인 음식점업에 대해 매출액 규모별로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를 확대하였습니다.

(현 행)

(개 정)

매출액(6개월)	공제한도	매출액(6개월)	공제한도	
			음식점업	기타
1억원 이하	60% (‘14.12.31까지 적용)	1억원 이하	60%	50%
1억원~2억원	50%	1억원~2억원	55%	
2억원 초과	40%	2억원 초과	45%	40%

- 연간 농수산물 매입액의 75% 이상이 하나의 과세기간에 집중되는 제조업의 경우 1기분·2기분 공제한도를 합산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4년 세법개정 후속시행령 개정 보도자료

음식점업에 대한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 확대

■ 추진배경 : 음식업자 부담 완화

■ 주요내용

- ① 개인사업자인 음식점업에 대한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 확대
 - 현행 : 매출액 1억원 이하 60%(‘14.12.31까지), 1억원~2억원 50%, 2억원 초과 40%
 - 개정 : 매출액 1억원 이하 60%(‘15.12.31까지), 1억원~2억원 55%, 2억원 초과 45%
- ② 농수산물 매입액이 특정시기에 집중되는 제조업에 대해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요건 완화

■ 시 행 일 : 201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잠정, 개정안 입법예고 중)



역외탈세 방지 강화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 044-215-4331)

■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거주자의 판정기준, 국외증여에 대한 과세와 역외탈세에 대한 제재가 강화됩니다.

- 해외 거주를 가장한 탈세 방지를 위해 거주자 판정기준 중 국내거주 요건을 1년 이상 → '6개월(183일) 이상'으로 강화하였습니다.
- 국외재산 증여에 대해 외국에서 과세되는 경우 국내 과세면제 →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으로 변경(수증자가 증여자의 특수 관계자인 경우에 한함)하였습니다.
- 국제거래가 수반되는 부정행위에 대해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하고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인상하였습니다.
 - 국세부과제척기간 : 10년 → 15년
 - 신고불성실 가산세 : 산출세액의 40% → 60%
-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시 벌금 등 제재를 강화하되, 수정·기한후신고시 과태료 감면을 확대(감면율 10~50%→10~70%)하였습니다.
 - 벌금 : 미신고금액(50억원 초과시)의 10% 이하 → 20% 이하
 - 과태료 : 미신고금액의 4~10% → 10~20%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4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역외탈세 방지 강화

- 추진배경 : 역외탈세 방지 강화
- 주요내용
 - 거주자 판정기준 강화, 국외증여 과세 및 역외탈세에 대한 제재 강화 등
- 시 행 일 : 2015.1.1



해외여행자 휴대품 통관제도 개편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044-215-4412)

- 해외여행자 휴대품 기본면세한도의 상향조정('14.9.5. \$400 → \$600) 이후 면세한도를 초과한 휴대품의 성실신고를 위해 통관제도를 개편하였습니다.
 - 면세한도 초과 휴대품을 서면으로 자진신고한 여행자는 내야 할 세금에서 30%를 경감 받도록 개선하였습니다.(15만원 한도)
 - 한편, 면세한도 초과 휴대품을 반입하였는데도 자진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여행자에 대한 제재는 강화하였습니다.
 - 자진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납부할 세금에 추가로 부과하는 가산세율 : 현행 30% → 40%로 상향조정
 - 입국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자진신고 불이행으로 가산세를 부과한 경우에는 60%의 가산세율을 적용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4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통관보류해제를 위한 중소기업의 통관담보금 경감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044-215-4413)

■ 대기업에 비해 담보제공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통관담보금이 하향 조정됩니다.

- 중소기업에 대한 통관담보금을 현행 물품과세가격의 60%에서 물품과세가격의 40%로 1/3 줄여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 현행 : (대기업) 물품과세가격의 120%
(중소기업) 물품과세가격의 60%
- 개정 : (대기업) 현행 유지
(중소기업) 물품과세가격의 40%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4년 세제개편 보도자료

통관보류해제를 위한 중소기업의 통관담보금 경감

- 추진배경 : 중소기업 부담 완화
- 주요내용
 - 중소기업에 대한 통관담보금 하향 조정
 - 현행 : 물품과세가격의 60%
 - 개정 : 물품과세가격의 40%
- 시 행 일 : 2015.1.1



고액 관세채권에 대한 징수권 소멸시효 기간 연장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044-215-4411)

- 고액 관세채권에 대한 관세징수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관세채권의 징수권 소멸시효를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4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관세 납세자의 경정청구기간 확대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044-215-4411)

■ 납세자의 권익향상을 위하여 관세 과다납부에 대한 경정청구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였습니다.

- 현행 관세법 상 정부의 관세 부과제척기간은 5년인데 반해, 납세자의 관세 과다납부에 대한 경정청구기간은 3년으로 상대적으로 짧은 상황을 개선한 것입니다.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4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FTA관세특례법 전면개편

기획재정부 FTA관세이행과 (☎ 044-215-4491)

-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법체계를 정비하고,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및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을 개편하였습니다.
- 법령체계를 협정관세 적용절차의 순서대로 재구성하고, 조문을 세분화하여 국민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원산지 조사대상자에 대한 조사권의 남용을 금지하고, 담보제공을 통한 협정관세 적용 보류 해제제도를 도입하는 등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납세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 또한,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 등 하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련된 사항의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법령>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FTA관세특례법 전면개정

■ 추진배경 :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FTA 이행법령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국민의 편의증진 및 FTA 활용률 제고

■ 주요내용

- ①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법령체계 정비
 - FTA 관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절차 중심으로 법조문 재구성(36개조문→ 46개 조문)
 - 복잡한 조문을 이해하기 쉽도록 여러 조문으로 세분화(예: 협정관세 적용신청 등 → 협정 관세 사전신청, 사후신청)
 - 모든 FTA에 적용되는 일반원칙을 보완(예: 협정관세 적용요건 및 원산지 증명 원칙)
- ② 납세편의 제고 및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 수입자가 원산지 조사기간 동안 조사대상물품과 동일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납세담보 제공시 협정관세 적용
 - 원산지 조사시 세관공무원의 조사권 남용 금지
 - 협정관세 적용배제시 가산세 징수·감면 등의 근거 신설
- ③ 하위법령에 규정된 국민의 권리·의무 관련 사항의 법률 근거 명확화
 - 원산지를 자율증명하거나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첨부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 및 해제 근거 신설
 - 원산지증빙서류를 반복적으로 허위로 작성한 자를 협정관세 적용제한자로 지정하는 근거 명확화
 - 관세청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및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근거규정 명확화

■ 시 행 일 : 2015.5.1(잠정, 개정안 국회심의중)